

하도급업체 살게 된다

광주시가 대기업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을 살리기 위해 직접 나섰다. 공사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미리 지급한 공사비를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선급보증서'를 이용해 지급난을 겪고 있는 대기업 대신 보증보험업체로부터 선

금을 돌려받아 하도급업체에 주기로 한 것이다.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대기업에 권장하는데 그쳤던 과거 관행과는 달리 선급보증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하도급 업체 공사대금을 받아낸 것으로, 이는 전국 최초 사례다.

광주시, 하도급 공사비 대신 지불

보증보험서 26억 받아 28개사에 지급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남양·금호·남양건설 등은 지난 3월30일 광주시 남구 빙고읍시민문화관 공사를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여 동안 하도급업체 28곳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26억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대표시공업체인 남양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자금난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하도급 공사대금이 밀리자 광주시는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368억 원 가운데 26억원을 반환해 줄 것

을 남양건설에 요청했다.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법정관리중인 남양건설은 이를 기한 내 지급하지 못했고, 광주시는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고려해 이미 남양건설로부터 받아 둔 선급보증서를 근거삼아 보증보험업체로부터 이를 대신 받는 방안을 추진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선금을 지급하면서 보증보험을 든 이유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 것

이지만 형식적인 절차였으며, 이를 근거로 해 선금을 되돌려받은 것은 지금까지 선례가 없었다"며 "최근 대법원에서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을 가장 우선해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어 이를 시도해본 것"이라고 말했다.

보증보험업체는 광주시가 이처럼 요구해오며 따라 자체 법률검토 및 행정안전부 질의를 거쳐 지난 13일 광주시에 26억원을 최종 지급했다. 광주시는 다음달 중으로 28개 하도급업체 중 재하도급 업체와 협의를 끝낸 하도급업체부터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수뢰 사건과 관련, 경찰 조사를 피해 60일째 잠적, 도피를 벌였던 오현섭 전 여수시장이 18일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경찰청에 자진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현섭 전 여수시장 잠적 60일만에 출두

'여수시 야간경관조명사업 비리 사건'의 연루 의혹을 받고 잠적한 오현섭(60) 전 여수시장이 18일 경찰청에 자진 출두했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잠적한 지 60일 만이다.

<관련기사 6면>

오 전 시장은 이날 오후 3시15분께 변호인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미군동 경찰청사의 특수수사과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이날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야간경관조명 사업 비리와 여수시 의원 연루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의 출두에 따라 야간조명사업 비리와 여수시의원 연루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오 전 시장은 자신의 측근인 전 여수시 국장 김모(여·59)씨를 통해 야간경관조명사업 시공업체로부터 2억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6월 15일 김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고, 자신과의 연루 의혹이 불거지자 6월 18일 돌연 잠적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서울서 하의도서 DJ 1주기 추도식

광주 분향소 추모발길 줄이어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인 18일 서울과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군 하의도에서 서거 1주기 추도식이 열렸다. <관련기사 3면>

서울 동작동 현충원 유품전시관 앞에서 열린 추도식에는 부인 이희호 여사 등 유가족을 비롯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권노갑 전 의원, 캐슬린 스티븐슨 주한 미 대사 등 주요 인사와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뜻을 기렸다.

추도식은 조순웅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회로, 추모 영상 상영과 김 전 대통령 추모위원회 위원장인 김석수 전 국무총리의 추도사, 이 여사의 김 전 대통령의 자서전 헌정, 참배 순으로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김 전 총리는 추도사에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발자취를 남기고 떠난 김 전 대통령의 일생은 위대했다"며 "일생을

조국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한 그 길을 따라 김 전 대통령의 못 다 이룬 꿈을 이룩해 영전에 바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군 하의도 생가에서도 이날 오전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거 1주기 추도식이 열렸다. 추도식은 전남 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식전 공연과 추도사, 분향 및 헌화 등의 순으로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생가 옆에 마련된 추모관 개관식도 열렸다.

또 이날 추모 분향소가 마련된 광주 YMCA 무진관에는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을 비롯한 광주 북을 지역위원회 시·구의원 및 당직자들이 합동 참배를 했으며, 광주시의회 전체 의원 26명도 합동 참배를 하는 등 지역정치인 및 시민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최경일기자 cki@

정부가 하도급업체에 현금 지급

미지급 원청업체 제재...11월 시행 추진

국가나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를 맡은 대기업이 2·3차 하도급 업체에 현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정부나 공기업이 대신 하도급 업체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련 예규를 개정해 오는 11월

부터 이 같은 개선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하도급 업체에 현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국가나 공기업이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입법예고된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계약의 공정한 체결과 이행을 저해하는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을 제한할 때 국가사업의 차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공사를 맡은 대기업이 2·3차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하면 지금까지는 현금 지급을 제대로 하라고 권고하는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나서 현금 지급을 대신 해주고 대기업에 제재를 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포항 1인 숙박 (1인 1실) (1인 1실)
건강 및 모두 실현 가능한 최우
* 객실 임대 - 35,000원 *
* 대량 임대 *
* 객실 임대 - 35,000원 *
* 대량 임대 *
* 객실 임대 - 35,000원 *
* 대량 임대 *
이당크관광호텔
예약문의 227-8500

학교 설립 56주년 (1954 ~ 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커튼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과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광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최익현 연극 '너희가 나라를 아느냐'
오늘 티켓 배부합니다
오전 10시 광주일보사 16층
문의 : 062-220-0525

'확' 바뀐 프라도호텔 웨딩홀에서
당신의 미래를 시작하십시오!
일반 레스토랑 가격으로 무심나라
www.pradohotel.co.kr